

‘남도의병 역사공원’ 전남 시·군 유치 경쟁 뜨겁다

전남도, 후보지 공모...보성·해남·함평·나주·구례 등 유치선언 잇따라

다른 지자체도 물밑 홍보활동...33만㎡ 부지 건물 연면적 1만 6500㎡ 내외

전남도가 전국 규모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의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병역사를 정립해 정의로의 역사를 일궈온 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연구원도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8월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달말이나 8월초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도의병 역사공원 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도 공원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8월말까지 사업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도내 일선 시·군의 공원 유치 경쟁이 시작했다.
 보성군이 유치 경쟁에 불을 댕겼다. 보성군은 지난 3월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데 이어 최근 군청에서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해남군도 지난 6월 관내 각 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해남군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각종 의병 관련 자료 작성과 함께 군민들의 열망을 모아갈 유치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도 강인규 시장이 최근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선언했다.
 나주시는 공원 유치를 위해 후보지를 불색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도 나운수 군수 권한대행이 최근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구례군, 곡성군 등도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해 불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대상지 선정 작업은 한전공대 후보지 선정과정처럼 평가기준을 만들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것이다"면서 "사업대상지는 8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33만㎡ 부지에 건물 연면적 1만 6500㎡ 내외로 구성하고 있는 남

도의병 역사공원은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조형물, 학예실, 교육관, 편의와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역사기념관이라는 무겁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며 사료나 유물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증자 전시실,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기획 전시실,

남도역사 북카페, 미니어처 전시실, 어린이전용 체험관 등도 함께 들어서게 된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청 앞 공무원 노동자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노총 광주본부와 광주·전남차차단체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동자 퇴직금 제도 개선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한전공대 '윤곽'...내일 균형위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회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



산학연 클러스터가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곧 드러난다.
 8일 한국전력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운영계획이 담긴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이 오는 10일 오후 4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열리는 한

전공대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보고회)에서 공개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안전 조율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보고회에는 송재호(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정부 재정지원 방안 논의 예정
 설립 기본계획 용역 포함 '최종 마스터플랜' 8~9월께

7개 부처 차관,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대학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안 요약집을 보고 받고 논의를 벌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조율 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대학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개되는 용역안 요약집에는 건학이념, 학생·교직원, 교과체계, 운영방향과 대략적인 설립비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보고회를 통해 공개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을 정부부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되면 용역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한 축을 차지하는 캠퍼스 조감도가 포함된 '건축설립 기본계획안'은 이번 보고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전 관계자는 "건축설립 기본계획 용역안까지 포함된 '최종 마스터플랜'은 오는 8-9월께나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비는 캠퍼스 건축설립 기본계획안까지 확정돼야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해 관계자 협의를 마치고 9월께 '학교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이후 '공대 설립안'을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고3 기말고사 유출 의혹 관련

광주시교육청 긴급 특별감사

학교 측 "전체 학생에 제공한 문제 중 일부"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수학문제를 놓고 유출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8일 특별감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감은 8일 복귀 모 사립고 기말고사 공정성 문제와 관련, 감사관실 주관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팀은 감사관실의 2개팀과 교과 전문가인 교육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사전조치로 이날 오전 중등교육과 장학관과 장학사 등 4명으로 현장조사반을 꾸려 논란이 된 A고에서 학교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출 의혹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반은 우선 지난 5일 실시된 기말고사 수학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와 서술형 2문제 등 모두 5문제(총점수 26점)를 상위권 학생들과 구성된 특정 동아리반에서 미리 풀었다는,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동아리반에서 풀어진 문제와 실제 시험문제의 유사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은 또 30여 명이 활동중인 해당 수학동아리의 구성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대다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점에 주목해 기숙사 운영 실태와 휴일에 운영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또 9일 수학5문항에 대한 재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수학 이외 과목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자연계열 6개반 학생들은 다 볼 수 있는 자료였다"며 "3월부터 제공한 문제는 900~1000문항 중 5문항이 비슷한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인호 기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